

제3회 경제학과 자연법 정치철학의 만남-로스버드의 “자유 의 윤리”

-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자유주의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가?

김이석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자유주의 정책을 제안하는가? 오늘 미제스 탄신을 기념하면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만한 질문이다. 미제스는 누구나 인정하는 20세기 경제학자들 가운데 가장 비타협적으로 가치중립 자유주의 경제학을 옹호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논거로써 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제스는 누구보다 ‘가치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이 하나의 과학으로서 정립되려면 특정한 윤리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치중립성’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과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태도였다. 그렇다면 가치판단이 배제된 과학의 입장에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규범적 주장을 할 수 있을까?

1. 사회효용함수의 거부

흔히 경제학자들은 특정 사회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그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비교를 통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 정책을 추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정책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미제스는 사회효용함수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사실 그런 ‘사회적’ 편익과 비용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려면 개인 간 효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이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정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처분할까? 경제학자들은 그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그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을 비교해 결정한다고 개인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물론 한계비용을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차선의 대안이 주었을 기대 효용이라고 보느냐의 여부가 경제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 정책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 정책이 어떤 사람의 효용은 증가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면 사회적 효용(편익)은 증가한 것인가?

각자의 효용을 효용함수로 표현하는 것을 편의상 인정한다고 해보자. 특정 재화들의 묶음을 그 효용함수에 넣어서 나온 효용의 크기는 비록 기수적으로 표현되었다

라도 재화들의 묶음들에 대한 선호의 순서를 나타낼 뿐 그 크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궁극적으로 각자의 효용이 서로 비교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사회비용의 개념에 대한 경제학자들은 두 입장으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사회비용 개념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안전장치에 의존하고자 했다. 다른 아닌 파레토 기준이다.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낮추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보고,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대개의 정책은 일부 사람들의 효용은 높이는 반면 다른 일부 사람들의 효용은 낮추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은 이보다는 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보통이다. 개인의 효용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더라도 각자가 그 정책에 따른 효용의 감소를 감수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으면 보상이 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 정책들을 실시할 때 보상을 다해 주고도 남는 게 발생한다면 그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공리주의적인 파레토 기준은 ‘기득권의 문제’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노예제도 폐지가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에게 그가 수공할 정도로 보상하고도 남는 게 있을 때만 정당화된다. (자유주의 정치신념에 의하면 개인의 인신은 양도할 수 없는 각자의 것이므로 보상을 해야 할 주체는 부도덕하게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보상을 받아야 할 주체는 노예주가 아니라 노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보상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적정한 보상’을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봉착한다. 보상을 받을 사람은 무조건 높은 보상을 바랄 것이다. 시장거래가 가능한 재화의 보상조차도 그가 산 가격은 알 수 있지만 그가 특정가격에 샀다는 것은 그 가격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의미지만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느 대안이 더 큰 만족을 주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뿐 얼마나 더 많은 만족을 주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시장가격으로만 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예 시장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시장거래의 기회를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시장가격보다 더 낮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특정인의 시장 구매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이것뿐이다. 교환 당시, 그는 그가 교환에서 포기하는 것(화폐)에 비해 그가 얻는 것(재화)의 가치가 더 크다고 여겼다.

2. 미제스의 기준1: 정책의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가

미제스는 공리주의자였지만, 미제스는 이런 개념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여타 공리

주의자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간섭주의 정책을 비판할 때도 그런 정책으로는 그 간섭주의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로는 노동자 일반의 고용의 증대 혹은 노동자 일반의 임금상승이라는 정책의 의도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중립적' 비판은 최저임금제라는 로스버드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제와 같은 간섭주의 정책을 내세운 사람의 목표가 미세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동자 일반의 고용의 증가나 임금의 상승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왜 최저임금제가 고용의 증가가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며, 노동자 일반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렇지만 정책의 의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를 제시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부자의 것을 빈자에게로 재분배하는 정책에 대해 미세스는 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올바르게 이해된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올려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미세스가 말하는 올바르게 이해된 이익은 장기적 이익을 말하지만 가난한 다수 대중이 높은 시간선호로 인해 지금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미래에 들어올 더 큰 돈보다 얼마든지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부자들을 약탈하자는 정치적 선동이 통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선호하고 동시에 부자들과 내가 가진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결과적 평등 상태를 더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후세대의 희생을 기초로 한 현세대가 받을 연금의 인상은 현세대의 이익에는 봉사할지 모르지만 그대들의 자녀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수십 번 강조하더라도 어쨌든 대중은 “내가 죽은 뒤 홍수가 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고 할지 모른다.

3. 미세스의 기준 2: 경제학자가 아니라 자유주의를 믿는 시민으로서의 비판

미세스는 공리주의자였지만,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죽음보다는 삶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함을, 가난보다는 풍요를 선호한다.” 는 전제 아래 이런 전제를 믿는 자유주의자 미세스로서 간섭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미세스의 입장은 당연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는 단순한 공리주의와는 달리 사람들의 선호를 자유주의와 조화되게 일반화하는 시도를 보태고 있다. 그

래서 그런 단순한 공리주의와는 다르다. 그렇지만 대중들의 가치판단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미제스로서는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는 것을 염려한다.” (不患貧患不均)는 데 심정적으로 동의하고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찬성한다면 미제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제스는 이들에 대해 아마도 그렇게 해서는 곤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좀 곤궁해지더라도 고르지 않는 것을 더 중시하겠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성을 지키려는 공리주의자로서 별로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미제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간섭주의의 효과가 누증됨으로써 축적된 자본이 급격하게 소비되어 생산의 급격한 감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간섭이 간섭을 불러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렇지만 미제스의 경고는 새겨들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간섭주의의 누증으로 자본의 소비와 생산의 감소가 너무 커지는 지경에 도달하면 아마도 대중은 다시 간섭주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랬다가 다시 생산이 늘어나고 자본이 축적되면 다시 간섭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정치적 사이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로스버드가 지적하듯이 미제스는 생산의 감소를 별로 초래하지 않지만 자유주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가주의적 간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4. 로스버드의 “자유 의 윤리”

미제스는 가치중립성을 평생 포기하지 않은 채 경제학을 바탕으로 공리주의자로서 간섭주의 정책의 폐해를 줄기차게 지적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사회효용함수나 사회비용함수와 같은 문제가 있는 개념들을 아무런 의구심조차 없이 마구 사용한 여타 경제학자들과는 달랐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치(윤리)중립성과 자유주의의 옹호는 양립되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미제스의 후계자로 볼 수 있는 로스버드는 미제스를 계승하면서도 미제스가 봉착한 어려움을 ‘가치중립성’ 원칙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그 대신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찾아 나섬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즉,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자유 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윤리적 근거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그 결과물이 『자유

의 윤리』(Ethics of Liberty)다. 미제스의 후학으로서 우리는 미제스가 정부 간섭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튼튼한 논거 위에 서고자 애썼던 노력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과연 로스버드가 걸은 길은 미제스보다 튼튼한지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후학으로서 미제스를 더 영예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